

전북도의회 상임위 추경 심사

“내년에 꼭 수소충전소 건립토록 노력해달라”

농산경위, 혁신성장산업국·일자리경제본부 추경안 심사서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추경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4일 제375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9억 3,000만원보다 27억3,000만원이 감액된 482억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2억5,000만원보다 34억4,000만원이 감액된 1,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21억8,000만원보다 907억8,000만원이 증액된 2,729억7,000만원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34억4,000만원보다 9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4,796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농산경위추경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020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에서 전주시에서 건립예정이었던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이 내년으로 연기됐는데 전북도가 그린뉴딜정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내년에 꼭 수소충전소가 건립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성환 의원(전주7)은 수소차, 수소충전소 안전분야 탄소소재 활용제품 보급지원사업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무선비상호출시스템 2개를 설치한다고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다양한 분야의 탄소제품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북 과학기술진흥원 설립방안 및 타당성 용역사업에서 불과 몇 개월전 예산편성 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액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2020년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에서는 전주시에서 계획되어있던 수소충전소 건립 예산을 삭감하고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들간 연관성을 잘 살펴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스관련 시설개선 지원사업보다는 전기를 사용하는 인덕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비용절감과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자동차부품기업 융성성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자동차산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수출저조나 내수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의사들, 집단진료거부에 따른 피해 책임져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아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공의분들도 환자 곁으로”

이용호 의원, 당정-의협 합의 관련... “수련환경 개선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당정-의협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국회와 정부, 산배 의료인의 결단을 믿고 어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오늘 당정-의협 합의에 대한전공의협회의 불참에 안타깝다”며 “전공의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환자와 국민들께서 더 큰 불안과 혼란을 겪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 의협 모두 적지 않게 양보해 이뤄낸 합의인 만큼 이제 그만 갈등에서 벗어나 국민과 정부, 모든 의료계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합의와 전공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



급·의상·감염·분만 등 기피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기로 한 만큼 의료계 입장과 최근 논란을 겪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환복위, 환경복지국·새만금해양수산국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4일 2020년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원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복지여성보건의국을 오후에는 환경복지국과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후 지방재정법, 전북도 재무회계규칙 등에 적합한지 여부와 효율적인 예산편성 여부를 관련부서의 설명과 자료제출 등을 근거로 추경의 타당성에 대해 심의했다.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종사자 50인 이상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예산에 대해 “사업의 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경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 묻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부도나거나 부도직전인

데 음식문화대전 등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들을 무조건 취소할 것이라 가능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실행해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1)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추경설립) 사업은 6개의 음압병상(1병실 1병상)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편성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우리 도내 병상 확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당부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생활습관 서구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건강관리로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10개 시, 군만 선정된 이유와 전문인력의 자격이 무엇인지 따져 묻고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 1)은 올해 들어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의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은 9월에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액이나 삭감 조정에 신중을 기하고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만성질환 등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14개 모든 시군에 공문이 발송됐는지 내내에도 사업이 시행되는지 등에 대해 묻고 본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독려를 당부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개인시설 1,000만원, 법인시설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그 규모가 모두 상이할 것인데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묻고 세부 설명과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교육청,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 설치”

김희수 도의원

지난 4일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6)은 부교육감이 참석한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정책질의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조리 사용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어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 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



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감액되는 예산과 새로운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많다”며 “힘든 시기지만 예산 편성,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이 있을 때 교육가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 감시단”의 설치를 촉구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에 이어 향후에 있을 예산심의 때에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와 감시단구성에 타 시,도보다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수산종자산업 발전 종합적 지원 근거 마련

황영석 도의원 발의 조례안 환복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수산물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난 3일 제37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이 변동되는 등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수산종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와 수산종자사업자의 책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수산종자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친어나 모태의 대역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내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7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객관적 수해 원인 규명을”

도의회 문건위, 조명래 환경부장관에 수해피해 조사 결과 전달 조 장관 “피해주민에 송구, 댐관리 조사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조 장관에게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달 관리 필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정민 위원장은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 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라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하천시설별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시설별 설계빈도·정비사업주기·관리기준도 달라 유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댐에 직·

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은 댐과 함께 치수·이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직접 관리청으로 전달관리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댐 수위 조절 및 방류 실패로 인한 수해피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댐 관리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하여 발생했다”며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법, 댐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중간에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